

동북아 언론의 이해: 한·중·일 언론의 갈등사례 보도를 중심으로*

김성해**·심두보***

- I. 문제제기
- II. 문헌조사
- III. 분석사례,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 IV. 분석결과 및 해석
- V. 결론 및 함의

동북아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공동기금이 탄생했고, 일본과 미국의 정권 교체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협력에는 많은 장애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및 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에 그 출발점으로 동북아 3개국 언론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먼저 다양한 언론모델을 비교함으로써 한중일 언론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 다음, 3개국 언론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성장배경, 정부와의 관계 및 최근의 문제점 등을 조사했다. 끝으로, 한국의 ‘용산사고’, 일본의 ‘무차별 살인사건’ 및 중국의 ‘멜라민 분유파동’에 대한 기사 295개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시대 각국 언론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양상을 이해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한중일 3국 언론은 미국식 모델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서도 각국의 정치시스템과 언론에 대한 규범적 가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 이 연구는 뉴스통신진흥회 연구용역의 자료 일부를 이용한 것으로, 2009년 한국 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뉴스통신진흥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날카롭고 생산적인 지적을 해주신 세분 심사위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한국언론재단 객원 연구위원

*** 성신여자대학교 부교수

드러났다. 중국의 <인민일보>와 <광명일보>에서는 여전히 사회주의 언론의 특성이 반영되었고, 한국의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는 형식적 통일성이 발견되는 가운데 정치적 입장에 따른 정파성이 발견되었다. 또 일본의 <아사히>와 <산케이>에서는 언론과 정부의 공생관계 및 언론규범에 대한 합의가 드러났다. 이 연구를 계기로 한중일 3개국의 정치, 경제 및 뉴미디어 등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 아시아공동체, 언론모델, 동북아협력, 언론과 정부, 언론의 규범적 가치

I. 문제제기

냉전 시기에 동북아시아는 러시아, 중국과 북한을 축으로 하는 대륙세력과 미국, 일본 및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세력 간의 치열한 대립공간이었다. 그러나 1990년 냉전의 붕괴 이후 동아시아는 공존과 협력의 무대로 변했다. 1992년 역사적인 한중수교 이후 1994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1995년에는 장쩌민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중간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 한일간의 군사교류 및 협력도 점차 본격화 되었다. 1994년 한국 해군은 처음으로 일본 방문 훈련을 실시했고, 1997년에는 장관급 한일군사협력 논의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동북아 3개국 간의 협력은 제한적으로만 진행되었다. 예컨대, 한국과 중국 정부는 1995년 ‘일본 망언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했고, 일본은 1996년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을 통해 중국봉쇄 정책에 합의했고, 한국과 중국은 1997년 9월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통화기금(AMF)에 반대하기도 했다.

1997년 가을의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이었던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외환위기를 맞아 미

국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미국 재무부는 또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통화기금을 반대함으로써 위기의 조기 진화를 방해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주도의 구조개혁을 통해 자국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대외정책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Stiglitz 2002; Wade 2004).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세계은행과 미국내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금융협력 움직임은 이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김성해·이동우 2009; 이찬근 1998).

동남아연합과 한중일 3개국은 1997년 12월 ASEAN+3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1998년의 미야자와선언(Miyazawa Initiative)과 2000년의 치앙마이선언(ChiangMai Initiative) 등에 잇따라 합의했다. 일본은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30억불의 차관을 제공했고, 1998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수상 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에 합의했다. 동북아의 화해 분위기는 또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2002년 일본 고이즈미 수상의 평양 방문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경제, 금융 및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동북아 협력은 2002년 이후 미국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일본 고이즈미 정부의 신사참배, 미국에 대한 편중 외교 및 아시아 경제권의 급속한 회복 등으로 인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2001년 12월, 미국 부시 행정부는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의 탈퇴를 선언함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전역미사일 체제(TMD)의 구축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2002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선언하는 한편,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무기(HEU) 개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럽스펠드 독트린으로 알려진 미국의 2003년 미군재배치계획(Global Defense Posture Review)과 2004년의 탄도미사일방어체제(Ballistic Missile Defense)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은 ‘상하이협력기구’(SOC)에 합의했고, 그 결과 동북아에서는 새로운 군사적 긴장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김태현 2005; 윤영관 2002).

2002년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실패로 끝난 직후부터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은 미국 중심의 외교를 선언했고, 2004년 8월 15일 광복절에는 야스쿠니 심사에 공식 참배했다.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로 인해 중국에서는 대규모 반일시위가 벌어졌고, 급기야 중국은 2005년 아세안+3 정상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출범 초기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한국의 노무현 정부도 2006년 '독도 독트린'을 통해 이러한 일본정부를 비판했으며, 이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무기연기 및 한미FTA의 조기 협상으로 이어졌다(이근 2006).

2001년 이후 가속화 된 아시아 경제의 빠른 회복도 동북아 협력의 강화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2003년 출범한 아시아채권 시장은 기대만큼 활성화 되지 못했고,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과 아세안 국가들의 무관심으로 아시아단일통화 문제는 우선순위에 서 밀려났다. 그로인해, 동북아 협력은 지난 2008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문화, 학술 및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동아시아 공동체와 동북아 협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버락 오바마 정권의 출범과 일본 하토야마 정권의 등장 등 2008년 이후 진행된 국제사회의 변화를 통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파로 인해 아세안(ASEAN)과 한·중·일 3개국은 2009년 5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공동기금 설치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으며, 2010년 3월 24일에 공식 가동될 예정이다. 동북아 협력의 가장 큰 장애 요인 중의 하나였던 북한 핵문제 역시 오바마 정권의 등장으로 실마리를 찾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오바마 정권은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전임 부시 정권에 비해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도 완화되고 있다. 일본에서 민주당 출신의 하토야마 정권이 등장한 것

도 동북아 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은 일본 외교의 중심을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과 경쟁할 수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중국 정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동(북)아시아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3개국이 진정으로 협력하고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는 여전히 너무 많다. 세계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를 둘러싼 한일 언론의 신경전이라든가(김동률 2009/03/01), 중국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과정에서 벌어진 양국 국민의 충돌은 그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장관순·강병한 2008/04/28). 또 독도와 조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물론 역사교과서 및 동북공정을 둘러싼 불협화음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동북아 3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고정관념(stereotype)도 뿌리 깊다. 동북아 협력은 이에 따라 인적·문화적 교류와 상대국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서로간의 차이점에 대한 관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한중일 3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언론 등의 현황을 보다 제대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흔히 언론은 세계를 이해하는 창이라고 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언론을 통한 간접경험은 상대국에 대한 평가는 물론 인식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연구는 이에 동북아 3국을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 이들 국가의 언론 현황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사회적 갈등양상에 대한 보도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에서 언론이 차지하고 있는 가치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간 한국과 일본 양국 언론에 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령 한국외국어대는 2005년 일본 NHK 방송연구소와 함께 한국과 일본 공영방송의 상대국에 대한 보도 양(보도시

간과 건수), 주제, 형식, 묘사 방향, 상대국에 대한 주요 견해를 분석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매년 한일 양국의 보도양상을 상호 비교하고 있으며, 한국언론학회도 매년 동일 주제에 대한 양국 언론의 보도를 비교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동북아 3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한 비교연구도 조금씩 활성화 되고 있다. 김영욱과 동료들은(2007) 한중일 3개국 언론이 상대 국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분석했고, 정재민과 서라미(2008)도 8.15라는 공통된 경험이 한중일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바 있다. 또 김경모와 김성해(2008)도 아시아공동체 및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아시아 언론들의 실제 보도를 역사적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전 지구적 단일시장이 형성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동북아 3개국 언론의 보도 행태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혹은 그에 상응하는 언론의 변화가 실제 보도를 통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더구나 제도적 변화가 언론보도에서 실제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다. 이 연구는 이에 다음의 문헌조사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도 여전히 경쟁하고 있는 여러 언론모델의 특성을 알아보고, 동북아 언론이 이들 모델을 어떻게 수용 혹은 전용(轉用)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언론의 주목을 비교적 많이 받았고,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유추해 낼 수 있으며,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각국 언론의 실제보도를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3국 언론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드러내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각국의 언론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갈등이슈에 대한 보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동북아 언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II. 문헌조사

1. 글로벌 언론모델의 이해

국제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언론 모델이 있는데, 이는 언론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정치시스템과 역사적 배경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각국 언론을 몇 개의 모델로 구분하고, 보다 이상적인 언론모델을 제안하고자 한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다. 가령,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일부 학자들은 ‘언론의 4이론’(Four Theories of the Press)이라는 명제 하에 자유주의, 권위주의, 공산주의 및 사회책임 모델 등으로 각국의 언론을 구분함으로써 미국식 언론모델의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기도 했다(Siebert, Paterson, Schramm 1956). 특정한 모델의 우위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헬린과 만치니 (2009) 역시 미국과 유럽의 언론을 자유주의, 민주적 조합주의 및 분극적 다원주의 모델로 구분했다. 그렇다면 언론이 속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동북아 언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언론의 역사는 언론의 자유를 획득하려는 측과 그러한 언론을 사회통제의 수단 내지는 도구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정치)권력과의 갈등과 반목의 역사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이해방식은 한 사회의 역사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숙도나 경제발전의 달성도 수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랐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방식의 차이는 한 사회 혹은 국가 내의 저널리즘 및 저널리스트의 역할, 임무는 물론 그들에게 요구되는 규범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위에서 언급한 이른바 ‘언론의 4이론’도 언론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잘 알려진 접근방식들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나 ‘언론의 4이론’은 냉전체제 하에서는 유용한 접근방식이었으나, 사회주의의 몰락과 글로벌 시대의 출현에 따라 이론적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제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모델(Soviet-Communist Model)을 있는 그대로 원용하여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민족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 언론모델의 기원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 언론모델(Libertarian Model) 역시도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이상적인 실재로서 존재할 뿐이다. 언론의 목적, 언론의 소유(구조), 언론과 국가와의 관계, 언론과 국민과의 관계 및 언론의 역할과 임무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언론의 유형을 재분류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길핀과 길핀(2001)이 제시한 영미식 모델, 유럽식모델 및 발전주의모델의 분류법을 적용함으로써 동북아 3국 언론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Gilpin & Gilpin 2001).

그 첫 번째로 영미식 혹은 미국형 저널리즘 모델(Anglo-Saxon Journalism Model)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형 저널리즘은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저널리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 모델이 표방하는 저널리즘의 목적은 성숙되고 완성도가 높은 정치적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구현에 있다. ‘언론의 4이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유주의 모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 모델은 언론자유를 언론통제보다 우위에 두는 접근방식이다. 즉 이 모델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다양한 조직이나 기업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권력의 ‘제4부 모델(the Forth-State)로서의 이 모델은 전통적인 입법, 사법, 행정 권력에 대한 감시견(watchdog)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언론은 국가나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언론모델이나 사회적 책임모델에서의 공중관(公衆觀)이 그러하듯이, 이 모델에서 공중(public)은 존엄하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성찰능력을 갖춘 존재로 상정된다. 바꾸어 말해, 여기서 공중은 특정한 쟁점이나 이슈와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좋은 것과 진실된 것을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인식된다. 공중에 대한 이러한 낙관적 태도는 결국 사상의 자유공개시장 기제를 통하여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은 그 자체만으로도 진리의 자기실현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통하여 도출되는 의사결정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획득하는 초석이 된다는 신념과도 일치한다. 이에 따라, 저널리스트의 주요한 역할과 임무는 입법, 사법, 행정, 사회적 실패, 범죄, 그리고 정치지도자와 관련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에 있는 반면, 사람들의 의견의 형성이나 공중의 지적, 문화적 이해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Willnat & Weaver 2003). 이러한 미국형 모델 하에서 언론이 한 사회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이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받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미국형 저널리즘 모델에서 언론이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언론이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이 모델에서 언론에 요구되는 것은 환경감시, 공정성, 다양성, 그리고 객관성과 같은 규범적 덕목이나 속보성, 환경감시, 정확성, 정보성과 같은 가치들이다. 그러나 이 경우 언론은 정부는 물론 국민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제4의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인 대중의 욕구에 영합하는 정보제공에 몰두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력에 대한 지나친 비판으로

인해 정치적 냉소주의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제도나 기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제의 완성이라는 이상에 역행할 수 있다 (Nye, Philip & David 1997).

두 번째로, 유럽형 저널리즘 모델(European Journalism Model)이 있다. 이 모델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이 상당 수준 달성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두루 채택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형 모델과 유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저널리즘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의 민주주의의 완성보다는 사회적 다원주의의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이 모델에서 언론은 한 국가나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나 이해관계를 단순히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언론이 스스로 특정한 가치와 의제를 적극 주장한다. 또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주도의 언론과 달리, 언론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간섭은 어느 정도 인정되며, 그 소유구조 역시 공기업과 사기업에 의한 소유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이 모델 하에서의 언론은 미국형과 달리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defamation)과 같은 법률적 규제를 통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조한다 (Willnat & Weaver 2003).

미국형 모델에서 가정하는 공중과는 달리, 이 모델 하에서 공중은 계몽과 계도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언론의 강조점은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공중의 지적, 문화적 관심 사안이나 이슈를 발전시키는 데 주어진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공중은 잠재력은 있지만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도 언론의 규범적 가치 덕목으로서 정보성과 속보성, 환경감시, 정확성, 그리고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은 당연시 된다. 물론 미국식과 견주어 볼 때 속보성과 환경감시보다는 복잡한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보성 분석 및 해설기

사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는 차이는 있다. 그로인해, 유럽식 모델 하에서 언론의 탐사보도 기능은 약화될 소지가 있으며, 정부의 통제력이나 영향력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와 언론이 유착관계를 형성할 개연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발전 저널리즘 모델(Development Journalism Model)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미국형 모델과 유럽형 모델과 달리, 이 모델 하에서 언론은 정치적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이 한 참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 혹은 제3세계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 이 모델에서 언론의 목적은 한 사회의 경제발전이나 성공, 정치적 민주주의의 정착 및 전근대적 봉건제도의 혁신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그리고 언론이 이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기업과 공기업에 기반을 둔 소유구조는 물론 국가가 언론사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용인된다.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의 주요한 현안인 정치적 민주주의나 경제성장, 그리고 봉건제도의 혁파를 이루기 위해서 언론은 정부 혹은 국가와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며, 그에 따른 사회정치적 책무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물론 이 모델 하에서도 언론은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견 내지는 파수견으로도 기능한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정책적 실패와 정치부패 등으로 한정되며, 필요한 경우 언론의 자유도 어느 정도 유보된다(오택섭 외 2006). 즉, 계도적 안내견(guard dog)으로서의 언론은 이에 따라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덕목과 자질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계몽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발전모델이 전제로 삼고 있는 공중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저널리스트의 역할과 임무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발전 모델 하에서 언론의 규범적 가치는 정보의 다양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보다는 국가 구성원 간의 일체감 형성,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및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대변 등에 주

어진다.

그러나 발전 모델 하에서 언론은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중심추 역할을 하기보다는 권력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달리 말해, 발전 모델이 상정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한 사회나 국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며, 그러한 판단은 누가 내리며, 나아가 그러한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혜택이 국민 대다수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한 국가 혹은 사회의 발전방향이 국가이익 내지는 공공의 이익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내리며, 나아가 그러한 판단에 대한 정당성과 합법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동의가 획득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 국가나 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조연자/홍보자로서의 언론은 권력 기구로부터 독립을 보장받기 어렵고,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유착되는 비민주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동북아 3개국을 위에서 언급한 세 모델의 하나에 속하기 보다는 이들 모델의 장단점이 두루 반영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 일본에 비해 한국과 중국은 정치·경제 시스템 측면에서 최근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이 변화가 언론모델로 구축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전모델’의 특성은 좀 더 많이 남아있고, 이는 이들 국가의 언론들이 전통적으로 엘리트로서 기능해 왔다는 점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중일 언론은 글로벌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각국 언론의 역사적 변화와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동북아 언론의 이해

(1) 일본의 언론현황

성인 1,000명당 신문 판매부수라는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은 전 세계 제1위의 국가이다. 2007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매일 630.9부가 판매되어, 노르웨이(601.2 부), 콜롬비아(587.8부), 핀란드(514.7부), 그리고 스웨덴(466.2) 등 다른 신문강국을 제쳤다(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s 2007). 세계신문협회(WAN: 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s)는 2005년 세계 최대 발행부수 신문 100개를 발표했는데, 상위 5개 신문이 모두 일본 신문이었다. 즉, <요미우리신문>(1,400만 부), <아사히신문>(1,200만 부), <마이니치신문>(550만 부), <니혼게이지 신문>(460만 부), 그리고 <주니치신문>(450만 부)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신문은 위기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광고 점유율은 TV에 빼앗기고 있고, 독자들은 점차로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1-2006년 기간 동안 신문 판매고는 2.42% 하락했다. 반면, 2006년 온라인 광고 판매는 전년과 비교해 30% 증가했다. 인구의 70%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에 대한 정부의 제한 조치는 없다(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s 2007).

일본 신문의 위기에 대한 원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독자들의 신문에 대한 신뢰 감소를 들 수 있다. 이는 신문 스스로 초래한 면이 많은데, 오랫동안 ‘유일한’ 언론매체임을 자임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자행한 과열취재 관행이 결국에 가서 독자들로 하여금 신문이 오히려 사고 피해자 및 일반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든 점이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제정을 통해 신문의 과열취재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언론계를 대표하는 일본신문협회도 자성하는 차원에서, 1946년에 제정된 후 개정된 바

없는 -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언론관과 표현을 담고 있는 - 신문
윤리강령을 2000년에 개정하였다(Saito 2000).

현재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은 종합지, 스포츠지, 기타
전문지, 그리고 무료신문으로 구별할 수 있다. 위에서 간략히 살
펴본 발행부수 통계에서 드러나듯이, <요미우리> 등 전국적 종합
지가 일본 신문계를 이끌고 있으며, 지방지는 상대적으로 덜 발
달된 편이다. 이는 1920년대 초 발생한 관동 대지진과 같은 천재
지변, 제2차 세계 대전 참전과 패전 등을 거치며 이루어진 신문
사간의 합병을 통해 형성된 미디어 집중화에 따른 것이다. 스포
츠지들은 대개 유력 종합지의 계열사 형식으로 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닛칸 스포츠>는 아사히 신문사, <스포츠 니폰>은 마
이니치 신문사의 계열사이다. 무료신문의 여론 영향력과 열독률
은 높지는 않으나 2004년 현재 199개사에서 함께 2,342만 3,852부
를 발행하였다(이흥천 2005).

일본의 주요 신문은 사실상 미디어 복합기업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선, 1950년에 제정된 방송법에 의거하여 신문사들은 민
간방송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요미우리신문사가
도쿄를 포함한 간토 지방 일대를 주시청 권역으로 하는 니혼TV
를 비롯, 전국에 TV계열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아사히신문사가
TV아사히를 핵심으로 해서 전국에 방송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
다. 주요 신문사들은 또한 잡지, 출판, 광고, 마케팅 등 매스커뮤
니케이션의 전 분야를 망라한 비즈니스를 하여, 미디어 집중화는
일본에서는 이미 오랜 관행이다(이호영 2008, 29). 이러한 일본
신문의 기업화는 일본 사회 특유의 종신고용제도 및 연공서열
전통과 맞물려, 일본 기자들의 직업의식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즉, 기자들은 독립적인 언론인이라기보다 신문사의 직
원으로서의 의식이 강해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이다(프리먼 2006).

이밖에, 일본 언론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은 기자단

제도이다. 일본의 15개 주류 언론사 기자들은 각 국가 기관, 정당, 주요 기업에 기자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정보를 통제, 장악하고 있다. 잡지사 기자, 온라인 뉴스 기자, 프리랜서들은 기자단이 지배하는 주요 기관의 브리핑에 참석할 수 없다. 내부 규약이 엄격한 폐쇄적 조직으로서의 기자단에 소속된 기자들은 특정 기사를 쓸 것인지 여부, 언제 보도할 지 여부 등의 문제를 담합한다. 결국 한 신문은 다른 신문과 별 차이 없는 보도를 양산하게 된다. 또한 기자단 관행을 통해 형성된 정보원과 기자간의 유착관계는 언론의 독립적인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다. 출입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관행은 일본의 전국지가 갖고 있는 특징과 연결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전국지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읽히는 신문이다. 즉, 일본 신문은 정론지임을 표방하면서도 널리 읽히는 대중지적인 성격도 갖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로 하여금 논쟁적인 보도를 더욱 자제하게끔 유도하고 있다(프리먼 2006).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언론의 탐사보도는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이, 미디어 집중 현상, 일본 사회 특유의 소속 기업에 대한 충성, 취재 대상의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기자단 관행, 정론지와 대중지를 동시에 표방하는 태도 등의 요소들은 일본 언론이 독립적 사회제도로서 기능하는 데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일본의 언론 자유 순위를 세계 173개국 중 23위로 선정했다(Reporters without borders 2009).

2) 중국의 언론현황

신문은 중국 근현대사 시기 개혁운동, 민족 해방운동, 그리고 중국공산당 통치기를 거치며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도구였다. 레닌의 프로파간다 이론 및 모택동의 선전 선동 이론에 영향 받아 중국의 미디어 시스템과 언론은 공산당의 완전 통제 아래 있으

며, 공산당에 대한 봉사를 주요 책무로 삼고 있다. 공산당은 각 성, 자치구, 시 단위에 걸쳐 공식적인 당 기관지를 각각 발간할 것을 지시했으며, 또한 당 조직 내 여러 부서는 특수 목적 신문 - 이를테면 노동자, 청년, 지식인 대상 등으로 특화된 - 을 대대적으로 창간했다. 현재 중국에는 2,000 개 이상의 신문이 있다. 기본적으로 당과 정부 소유인 이들 신문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왔으며, 정부의 각 기관은 의무적으로 신문을 구독함으로써 신문 운영을 지원하였다(Zhao 1998).

1982년에 제정된 헌법 제 35조는 언론, 표현, 집회, 결사, 저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당이 언론과 미디어를 부속 기관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당의 노선과 언론 정책이 어떠한 법적인 조항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매체는 당의 정책에 봉사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고, 당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뉴스를 언제,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를 자의로 결정한다. 당의 원칙에 위배되는 언론적 표현이나 당의 토론과 토의를 거치지 않고 언론에 발표되는 사안은 ‘부르주아적 자유주의’라 비판받으며, 해당 언론인들은 숙청된다. 문화혁명, 천안문 사태 등 정치적 격변기마다 각급 신문은 폐간, 정간 등의 조치를 받아왔다(Yan 2000). 특히,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티벳과 신장의 소수민족 인권문제, 대만 독립문제, 팔론공문제 등은 금기시되고 있다. 2007년 말 시점에, 적어도 29명의 언론인과 51명의 온라인 활동가들이 구금 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국가별 언론자유 억압 통계에 있어 전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Freedom House). 이렇듯 중국 언론의 당 복무 원칙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발전언론’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으로 상징되는 중국 정부의 시장경제 정책은 정부의 미디어에 대한 시각을 프로파간다의 도구 이상의 것으로 - 즉, 산업으로 - 바꾸어

나가고 있다. 1996년에 시범 케이스로 선정한 민영 신문 집단(광저우일보 그룹)의 실험 성공에 고무되어 2003년 국가 언론 출판부(the State Press and Publications Administrations)는 법적으로 정부 소유인 모든 신문 및 간행물들로 하여금 사기업으로 재등록하도록 행정조치를 내렸다. 현재, 민영화를 선택하지 않은 수십 개의 신문만이 그대로 중앙 및 지방 단위 공산당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95% 이상의 신문들은 합병 등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 기업으로 재출범하고 있다(Xing 2004).

2003년에 실시된 외국 기업과 국내 개인 사업자들의 중국 내 출판, 방송, 인터넷 시장에 대한 투자 허용은 글로벌 미디어 회사들의 13억 인구 시장 진입경쟁으로 이끌어 중국 내 미디어 상업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 개방 정책이 언론 자유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법집행과 검열을 통해 공산당과 정부는 언론 통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Voice of America, Radio Free Asia, BBC 등의 해외 라디오 방송수신은 금지되고 있으며, 야후 등 검색엔진, 포털 사이트도 공산당의 검열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언론 통제를 위해 공산당은 2005년부터 친정부적 댓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오모당(五毛党, 50 Cent Party)을 조직, 운영하고 있다. 댓글 한 건당 중국 돈 5마오(50전)를 받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2009년부터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검열을 피하기 위해 많은 중국인들은 프록시서버를 이용하여 외국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정부가 이메일과 핸드폰 메시지도 검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3) 한국의 언론현황

정치권력 및 경제권력과 언론간의 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 한국 언론은 3국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1987년 이전까지 국내 언론은 권위주의적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고, 언

론은 정치 및 경제권력과 이른바 '3자 동맹'을 형성했다(윤영철 2001).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인위적으로 언론사 간의 경쟁을 제한했고, 일부 신문사들은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종속에서 유착으로 변했으며, 이는 김영삼 정부의 '언론장학생' 관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났다. 민주화가 진행된 1987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이어진 정부와 언론의 공생관계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부 관료의 주도권이 붕괴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던 외환위기의 결과 국내 언론은 독자적인 권력 집단으로 등장했다. 즉 전통적인 관료의 기득권이 부정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권력이 국제통화기금과 외국계 자본에 의해 위축된 상황에서 언론은 비판적 시민단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권력을 감시하는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다. 민주화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온 언론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공공정책의 성공을 위한 우호적 여론 확보의 필요성 및 경제위기로 인한 정권의 교체 등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 조항제(2003, 74)는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에 접어들어 “한국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 정치권력에서 미디어권력으로 이동했으며,” “정치권력이 여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권력으로 변하면서, 미디어권력이 정치권력의 종속적 또는 부수적 위치에서 정치권력을 유도하고 통제하는 권력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국내 신문사들은 공중파 방송에 진출하거나 다른 신문사를 복수로 소유할 수 없었고,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한 특혜금융을 묵인했다. 한국 언론은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윤보다는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언론기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위기 직후였던 1998년 재벌기업의 계열사였던 <문화일보>와 <경향신문>이

그룹의 구조조정으로 매각되어 사원주주제 회사로 바뀌었고, 부채비율이 너무 높은 신문사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도 급격히 줄었다. 국내 언론사들의 기업화는 위기에서 벗어난 1999년 이후 본격화 되었다. 1999년 삼성그룹에서 공식적으로 독립한 이후 <중앙일보>는 신문을 중심으로, 케이블방송, 인터넷 매체, 매거진, 출판사 등을 아우르는 언론기업으로 전환했다. 2000년 이후에는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과 같은 종합지 성격의 온라인 매체는 물론, 금융과 경제정보에 특화된 <머니투데이>와 <이데일리> 등이 속속 등장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영세한 규모에 머물고 있는 국내 언론기업(특히 신문사)들은 또한 부대수익 사업을 찾거나, 경제면을 확장하거나, 온라인 광고시장을 공략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언론사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언론권력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언론의 규범적 가치는 물론 언론인들의 정체성도 따라서 변했다. 신문 구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온라인 광고의 등장으로 신문광고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구매력 있는 소비자의 영향력이 증가했다. 그 결과, 신문을 포함한 모든 매체의 콘텐츠가 ‘개인금융, 여가생활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잠재적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연성뉴스가 더욱 확대되었다(김성해·안병익 2007). 정부와 광고비중이 낮은 기업에 대한 환경감시 기능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거대 광고주인 대기업에 대한 비판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제정임·이봉수 2007). 뿐만 아니라, 언론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핵심 독자층을 겨냥한 ‘정치적 편향성’도 증가했고, 이는 한국 언론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III. 분석사례,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문헌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동북아 각국의 언론은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언론의 관계, 공중에 대한 전제 및 언론의 규범적 가치는 실제 보도에서 어떻게 현실화 되고 있을까? 유사한 갈등 사례를 정하고 이에 대한 보도를 상호비교하고자 한 것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특정한 사례에 대한 보도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언론의 특성을 충분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우선 특정한 뉴스가 활자화 되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무수한 관문(gates)을 생각할 수 있다. 언론사 외적 요인으로 정치적 상황, 경제적 동기 및 여론의 압력 등도 있다. 또 언론사의 지향하는 가치, 조직문화, 편집적인 가치판단 및 기자들의 신념과 같은 내부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특정 기사가 활자화 되고 난 이후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독자의견란 등을 통해 전달되는 다른 언론사, 독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반응도 해당 기사를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 ② 정치적 또는 사회적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사건 또는 사안이고, ③ 정부의 역할 및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고, ④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분석 사례를 선정할 경우 이 작업이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다.

1. 분석사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사회갈등 이슈로 2008년 일본에서 발생한 무차별적 살인사건을 선정하였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 대량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언제 어디서 누가 희생양이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일본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1998년 이후 2007년까지의 10년 동

안, 이른바 ‘묻지 마 살인’ 사건은 무려 67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8년 한 해 동안만 모두 14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사망자 11명을 비롯한 사상자 42명은 집계가 시작된 1993년 이래 최고치였다. 학자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를 ‘핫김에 저지르는 부조리한 범죄’, ‘사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일으키는 불만 폭발형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의 확대, 교육제도의 허점 및 대인관계 단절’ 등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언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중국에서 갈등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2008년에 발생한 멜라민 분유사건은 비정치적인 사안으로 중국 언론이 비교적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고,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 국가위생 기준에 따르면 1급 분유의 단백질 함량은 18% 이상이며, 2급과 3급은 12-18%에 속한다. 등급이 낮은 분유의 경우 단백질 비중은 2-3%에 불과하며, 이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질소가 다량 함유된 멜라민을 섞게 된다. 멜라민의 질소함량은 우유의 15배이고 분유의 23배에 달하기 때문에, 멜라민을 유제품에 첨가하면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멜라민은 ‘신장결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때로는 사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한다. 2008년 3월부터 중국 소비자들은 유아들의 소변이 붉은색을 띠고 소변에서 결정현상이 나타난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에 따라 중국 최대 분유생산 업체 중의 하나인 산루그룹은 지방 관련부서에 검사를 요청하였고, 검사 결과 제품은 국가표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이 검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는 줄어들지 않았다. 6월 중순경부터는 영유아의 입원치료 사례까지 나타났고, 산루그룹은 이에 제품에 대한 전면 검사에 들어갔다. 검사 결과, 일부 불법우유 농가에 의해 멜라민이 첨가되었다는 것과 이것이 아이들의 신장

결석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2008년 6월 이 검사 이후에도 산루그룹은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증세가 나타난 일부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배상하는 수준에서 무마하려고 했다.

그러나 멜라민 분유에 대한 패닉이 확산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전국 290개 분유 제조업체 가운데 154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20개 업체가 만든 31개 제품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브랜드별로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산루그룹이 11개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산위안(三元)과 명뉴(蒙牛), 이리(伊利) 광밍(光明) 등 대형업체 제품에서도 각각 1건씩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9월 12일 “분유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저질 분유 판매에 대한 위법처리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유시장의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2008년 9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산루그룹의 오염된 분유를 먹고 발병한 환자는 1253명에 이르고, 그 중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멜라민 사건의 영향으로 중국 유업계의 빅3인 명뉴(蒙牛), 이리(伊利) 광밍(光明)은 2008년 한해 거액의 적자를 기록했다. 분유업계 전반의 손실액은 약 200억 위안에 달했으며, 이들 3대 유제품 회사는 CCTV2의 ‘대화-우유의 신용’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비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다. 2009년 1월 22일, 스자좡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번 사건의 주범 2명에 대한 사형 선고를 비롯, 관련자 10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김동환 2009). 그리고 문제분유로 피해를 입은 30만 명의 영유아 피해자 중 95%이상이 기업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언론의 정파성이 자주 지적되는 한국에서는 많은 비정치적 문제들도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서도, ‘용산 사고’ 또는 ‘용산참사’는 한국 사회의 갈등에 있어 언론이 개입하

는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번 사고는 2009년 1월 20일 경찰이 용산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진압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농성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경찰이 진입하는 순간 현장에 있던 시너에 불이 붙었고, 이로 인해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차리고, 1월 27일 당시 사고에 대한 1차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고서에서 화재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물론 최초 발화 지점이나 경찰의 과잉진압, 용역업체 동원 등 제기된 의혹들은 해소되지 않았다.

유족과 용산 재개발 4구역 철거민과 시민단체로 꾸려진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에 진압작전을 펼친 경찰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를 계속 미루어 왔다. 특히 범대위는 화재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경찰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 및 구속자 석방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장례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화재의 원인에 대한 잠정적 결론을 토대로 수사의 방향을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등의 외부세력 개입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1월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장례식은 치러지지 못하고 있으며, 범대위는 청와대가 계속 나서지 않을 경우 시신을 메고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

2. 자료수집

분석사례가 적절하더라도 분석대상 매체를 적절하게 선정하

2) 용산참사는 2009년 12월 30일에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 재개발 조합 간의 보상 등에 관한 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345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또한 2010년 1월 9일에 희생자 5명에 대한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지 못할 경우 언론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 이 연구는 이에 정치적 입장과 핵심 독자층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해당 사례를 충분히 보도한 매체를 선정하고자 했다. 먼저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사히>와 <산케이>를 선정했다. 아사히신문은 1879년에 창간되어 일본의 근대사와 함께 한 신문이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 중에는 가장 중립적 혹은 진보적인 정견을 표방하는 신문이라 평가받는다. 그리고 산케이신문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일본의 5대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이다. 경제지로 출범했으나 종합지로 전환하였으며, 국제뉴스를 많이 다룬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치적 이념의 차이 외에 인터넷을 통해 기사 검색이 용이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일본의 경우, 과거 기사를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혀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한 기사도 신문 지면에 실린 기사와 다른 경우도 많아 샘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본 최대의 신문으로 알려진 <요미우리>와 보수적인 <마이니치>신문을 분석하지 못했다.

분석매체로 선정한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 홈페이지에 각각 접속해 ‘무차별살인/살상사건’, ‘묻지 마 살인사건(通り)魔事件’, ‘연쇄살인’ 등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들을 검색했다. 1차 검색의 결과 관련 기사 대부분 2008년에 일어난 사건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에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로 분석기간을 다시 설정했다. 1차로 검색된 기사들 중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배경설명이나 심층적 분석을 결들인 기사 및 칼럼, 전문가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최종적인 샘플을 확정했다. 그 결과, 사건의 단순 정보 전달기사보다는 해당사건에 대해 폭넓은 해석을 시도하는 기사가 주로 수집되었다. 최종적으로 41개의 <아사히>기사와 61개의 <산케이> 기사를 선정했다.

멜라민 분유의 파장은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갔다. 그로 인해 이 사건에 대한 중국 당국과 언론의 관심은 상당히 높았으며,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들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이에 지식인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는 <광명일보>와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분석대상 매체로 선정했다. <광명일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에서 관리하는 기관지로서, 1949년 6월 16일에 창간되었다. 공산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충실히 알리는 한편으로 과학, 기술 및 문화면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식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전국에 41개의 기자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세계 22개국에 특파원이 파견되어 있다.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당 기관지로서 1948년 6월 15일에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중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고 영향력 있는 전국적인 신문으로, 당과 인민을 연결하는 교량이자 세계가 중국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주요한 창(window)이다. 제 16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당 중앙위원회는 인민일보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후진타오 총서기도 이 신문을 통해 여러 차례 중요한 지시를 내리고 혁신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신문에는 대체로 정치성을 띤 중요기사들과 정부당국이나 당지도자들의 연설, 정치적 해설 등이 주로 실린다. 또 사설은 중국공산당의 주장을 대내외에 표명하는 것으로 매우 중시된다. 멜라민 분유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08년 9월 11일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를 수집했다. ‘멜라민 분유,’ ‘오염분유,’ ‘산루분유,’ ‘멜라민 사건’ 등을 검색어로 사용했으며, 최종적으로 55개의 <인민일보> 기사와 38개의 <광명일보> 기사를 선정했다.

용산사건에 대한 사건을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과 그 이후 진행에 이르기까지 국내 언론의 보도태도는 정치적 입장을 중심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었다. 이 점에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 갈등양상에 대한 언론의 보도양상을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분석 사례가 될 수 있다. 또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서로 상반되는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도 적합하다. 사건이 일어난 2009년 1월 20일 이후 한 달간에 걸쳐 샘플을 수집했으며, 임의 샘플링 방식을 통해 분석

기사량을 동일하게 설정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신문사별로 각각 50건씩의 관련기사가 분석되었다.

3. 연구문제

동북아 언론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언론보도의 일반적 관행, 언론과 정부의 관계 및 규범적 가치가 실제보도에 반영되는 정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제기했다.

연구문제 1: 유사한 갈등사례 보도에 있어 동북아 언론의 보도양상은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가? 즉 기사유형과 기사작성자 및 권위자 인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동북아시아 언론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보도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즉,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태도 및 책임소재의 비중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동북아시아 언론에서 국가발전, 인권 및 다양성 등과 같은 규범적 가치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즉, 다양성, 균형성 및 가치 지향적 기사의 비중은 얼마나 다른가?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유사한 갈등사례 보도에 있어 동북아 언론의 보도양상은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가?

특정 주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양상은 언론사의 입장과 주제

의 중요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 해당 뉴스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예상보다 클 경우 후속기사와 심층취재 등을 통해 정보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한다. 언론의 보도양상 차이는 우선 기사유형의 차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기사유형

구 분		스트레이트	의견 기사	기획/ 분석	탐방/ 인터뷰	기타	소 계
일본	아사히	85%	10%		5%		100(41)
	산케이	49%	15%	28%	5%	3%	100(61)
중국	인민일보	69%	31%				100(55)
	광명일보	76%	24%				100(38)
한국	조선일보	40%	22%	26%	10%	2%	100(50)
	한겨레	42%	20%	14%	16%	8%	100(50)
소 계		59%(173)	20%(60)	13%(37)	6%(18)	2%(7)	100%(295)

위의 <표 1>에서 드러나듯 기사의 유형은 국가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비록 주제의 차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스트레이트의 비중은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의견기사와 기획/분석 등을 모두 감안했을 경우 국가보다 매체 간 기사유형에서 보다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일본의 경우, 정치적 성향에서 중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아사히>와 민족주의적이면서 보수적인 성향의 <산케이>에서 ‘무차별 살인사건’은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아사히>에서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85%에 달했고, <산케이>에서 그 비중은 49%에 불과했다. 언론이 해당 주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제화 하고자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획/분석 및 의견기사 비중에서도 두 신문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케이>에서 기획/분석의 비중은 27.9%에 달했지만 <아사히>에서 이런 유형의 기사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의견기사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발견된다. 부분적으로 이는 ‘뭇지마 살인’과 같은 사회적 병리 문제를 보수적인 <산케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슈화 하고자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과 달리 중국에서는 매체별 차이가 크지 않았고, 기사의 유형도 스트레이트와 의견기사만 발견되었다. <인민일보>와 <광명일보>의 스트레이트형의 기사 비중은 각각 69%와 76%에 달했고, 두 신문의 ‘의견기사’ 비중도 30%와 23%에 달했다. 중국 언론의 높은 의견기사 비중을 통해 중국에서도 비정치적인 사안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비교적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기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언론모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기사유형으로 봤을 때 한국은 일본과 더 유사한 측면이 많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스트레이트형’ 기사의 비중은 각각 40%와 42%에 달했으며, 의견기사의 비중도 거의 동일한 20%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기획/분석 기사의 비중이 26%로 <한겨레>의 14%보다 높았지만, ‘탐방/인터뷰’ 기사의 비중은 10%로 <한겨레>의 16%보다 낮았다. 두 신문에서는 또 다양한 형태의 기사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한국 언론이 최소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별 차이는 기사작성자에서 보다 뚜렷하게 확인된다.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 일본 언론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사는 자사 기자에 의해 작성되고, 한국에서도 그 비중은 비슷하다. 그러나 중국에서 자사기자의 비중은 비교적 낮았고 그 대신 통신사를 포함한 자국언론의 비중은 아주 높았다. 위의 <표 2>는 일본의 <아사히>와 <산케이>에서 ‘자사기자’의 비중은 각각 98%와 95%에 달하고, ‘외부필진’을 활용하는 비중도 아주 낮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뭇지마 살인’이 일본 국내 문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서방언론을 인용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이들 두 신문이 재정 및 인적 자원이 풍부한 거대 신문사였다는 점도 자사기자의

비중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기사작성자³⁾

신 문		자사 기자	자사 특파원	자국언론 (통신사포함)	서방 언론	외부필진	기타	소계
일 본	아사히	98%				2%		100(41)
	산케이	95%				5%		100(61)
중 국	인민일보	29%	2%	56%		13%		100(55)
	광명일보	47%		53%				100(38)
한 국	조선일보	92%				8%		100(50)
	한겨레	80%		2%	2%	8%	8%	100(50)
소 계		74% (218)	0% (1)	18% (52)	0% (1)	6% (19)	2% (4)	100% (295)

일본과 달리 중국 언론에서는 자국언론을 인용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인민일보>에서 자사기자가 쓴 기사의 비중은 29%에 불과했고, 신화통신 등을 인용한 기사는 56%를 넘었다. <광명일보>에서 자사기자의 비중은 47%로 비교적 높았지만, 자국언론을 대신 전하는 비중도 53%였다. 또 외부필진이 쓴 기사는 <인민일보>에서만 발견되었고 그 비중은 13%에 달했다. 국내문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서방통신 및 신문’을 인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자국 언론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통해 중국 언론의 경우 기사제휴가 보다 활발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언론의 높은 제도화 수준은 위의 <표 2>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두 신문 모두 ‘자사기자’를 통한 보도 비중은 92%와 80%로 높았다. ‘외부필진’을 통한 의제화 의도 역시 8.0%로 거의 유사했다. 물론 <한겨레>의 경우 통신사와 서방신문을 일부 인용하

3) 위에서 ‘자국언론’과 ‘서방언론’은 해당 매체의 기사를 전제해 지적하는 것으로 관련기사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 아님.

긴 했지만 그 빈도는 극히 낮았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국 언론을 인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통해 한국에서도 언론은 제후관계가 아닌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언론의 보도관행은 갈등사안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이 ‘의도적’으로 인용한 전문적 의견 제공자 (즉 권위자)의 분포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즉 언론이 보다 다양한 권위자를 인용하는지 아니면 정부기구나 관료를 보다 중요시 하는가를 통해 개별 국가내에서 언론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의 <표 3>에 나오듯 한중일 언론은 권위자를 인용함에 있어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 권위 있는 정보원의 인용 비중⁴⁾

구 분	국가/ 정부	정치인	기업인	사회 단체	국제 기구	언론	기타	소계	
일 본	아사히	39%			13%		2%	46%	100(41)
	산케이	44%	2%		16%			38%	100(61)
중 국	인민일보	56%		15%	2%		6%	22%	100(55)
	광명일보	63%		3%		3%	13%	18%	100(38)
한 국	조선일보	18%	26%	23%	6%			27%	100(34)
	한겨레	10%	25%	5%	20%		5%	35%	100(40)
소 계	41% (110)	7% (20)	7% (19)	10% (26)	0 (1)	3% (9)	31% (84)	100 (269)	

국가별로 봤을 때 국가/정부의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이었고, 중국은 가장 높았다. 한국 언론에서는 또 보다 다양한 권위자가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및 중국과는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일본의 <아사히>와 <산케이>에서 ‘국가기관과 정부관료’가

4) 한 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견을 제시한 정보원 1인을 선정해 이를 ‘권위자’로 코딩했다. 그러나 한국 신문의 경우 권위자가 없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직접인용되었지만 직업 및 소속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 ‘익명’으로 인용된 권위자의 경우 ‘기타’로 처리했다.

권위자로 등장한 비중은 39%와 44%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사회단체가 권위자로 등장한 비중도 12%와 16%에 달했다. 그리고 ‘기타’ 권위자의 비중이 46%와 37%에 달하는 것을 통해 두 신문사가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를 인용하고자 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물론 ‘기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무차별 살인’이라는 분석사례의 특수성이 반영된 때문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언론은 기사작성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며, 정보원의 권위를 빌어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언론이 채택한 ‘전문적 의견제시자’ (Cue giver)를 파악하는 것은 해당 언론이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언론의 자율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권위자의 인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언론에서도 일정한 자율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위의 <표 3>에 따르면 <인민일보>와 <광명일보>에서 정부관료가 권위자로 인용된 비중은 여전히 높은 56%와 63%에 달했다. 그러나 두 신문 모두 다른 권위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민일보>에서 기업인이 권위자로 등장한 비중은 14.5%로 비교적 높았고, <광명일보>에서 ‘기타’에 속하는 권위자 비중이 18.4%에 달했다. 다른 언론사를 권위자로 인용하는 경우도 두 신문 모두 5%와 13%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사회단체’와 ‘국제기구’를 권위자로 인용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한국 언론의 정부/관료 인용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다. 부분적으로 이는 한국 언론의 정치권력화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갈등이슈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할 것일 수 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은 또 비교적 다양한 권위자를 인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언론이 미국

식 모델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언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형식적 통일성과 더불어 언론에 대한 국제적 관행을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위의 <표 3>에서 드러나듯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권위자를 인용하는 비중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비중이 <한겨레>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동북아시아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보도를 통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의 언론은 여전히 정부에 종속적인 상황이며, 일본에서 언론은 정부와 오랜 유착관계를 형성해 왔다. 반면, 한국에서는 급속한 민주화와 외환위기 등을 통해 정부와 언론이 비교적 독립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갈등사례에 대한 보도에서도 이러한 언론과 정부의 관계는 비교적 잘 드러났다.

<표 4> 정부 및 정책에 대한 보도태도

신문		우호/ 협조적	비판/ 적대적	중립적	기타 (판단불가)	소계
일본	아사히	7%	7%	86%		100(41)
	산케이	13%	7%	80%		100(61)
중국	인민일보	2%	24%	74%		100(55)
	광명일보		18%	82%		100(38)
한국	조선일보	40%	22%	32%	6%	100(50)
	한겨레	6%	68%	20%	6%	100(50)
소 계		12%(35)	24%(72)	62%(182)	2%(6)	100%(295)

기자단제도와 엘리트 집단 내부의 강력한 유대를 특징으로 하는 일본에서 정부와 언론은 ‘비판’보다는 ‘건설적 협력’을 더 중

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Gamble & Watanabe 2004). 그 결과, 미국과 영국의 언론과 달리 일본 언론에서 정부에 대한 노골적 비판 기사는 많지 않다. 위의 <표 4>에서도 이는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중립적으로 알려진 <아사히>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적대적 보도태도의 비중은 7%에 불과하고, 중립적인 보도태도의 비중은 85%였다. 보수적인 <산케이>에서도 그 비중은 각각 6.6%와 80.3%로 유사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우호적/협력적 태도 면에서 <산케이>의 13.1% 비중은 <아사히>의 7.3%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중국에서 ‘멜라민 파동’은 그 자체로 중국식 자본주의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비쳐졌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중국산 물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최근까지 중국 언론은 정부정책과 사회주의 정당의 목적에 복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위의 <표 4>를 통해 정부에 대한 협조적 태도가 중국 언론에서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멜라민 파동’이라는 행정적 감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의 비중은 23.6% (인민일보)와 18.4% (광명일보)였다. 그리고 이 두 신문의 중립적 기사 비중은 각각 74.5%와 81.6%에 달했다. 물론 이는 이번 사건의 주요 책임자가 ‘산루그룹’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적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주정부는 물론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

한국 언론이 정치 권력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정부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위의 <표 4>에 의하면, <조선일보>에서 정부에 대한 우호적 보도의 비중은 40%에 달했고, <한겨레>에서 그 비중은 6%에 불과했다. <조선일보>에서 비판적 기사의 비중은 22%였지만 <한겨레>에서 그 비중은

68%에 달했다. 물론 <조선일보>의 정부에 대한 우호적 보도태도가 40%에 달했다는 것을 통해 한국에서도 언론과 정부의 유착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이러한 보도 양상은 신문사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 언론의 정파성에 대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김영옥 외 2009; 윤영철·김성해 2009).

〈표 5〉 책임소재의 분포

신문		문제 당사자	구조적 문제	정부 책임	기타	모름	소계
일본	아사히		15%	7%		78%	100(41)
	산케이	5%	23%	3%		69%	100(61)
중국	인민일보	20%	24%	9%		47%	100(55)
	광명일보	24%	16%			61%	100(38)
한국	조선일보	44%	18%	16%	8%	14%	100(50)
	한겨레	6%	8%	60%	8%	18%	100(50)
소 계		16%(48)	18%(52)	16%(48)	3%(8)	47%(139)	100%(295)

언론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지시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참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류언론에서 책임 규명은 명확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조장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일본의 <아사히>와 <산케이>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발견된다. 물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비중은 두 신문에서 각각 14.6%와 23.0%로 비교적 높다. 그러나 ‘알 수 없음’의 비중은 78%와 68.9%로 다른 책임소재에 비해 월등한 비중으로 높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묻는 비중도 일부 발견되지만 그 비중은 높지 않다. <아사히>에서 정부의 책임

을 묻는 비중은 7.3%였고 <산케이>에서 그 비중은 3.3%로 아주 낮았다.

중국에서 언론과 정부의 관계가 ‘건전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조짐은 위의 <표 5>를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인민일보>의 경우 정부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는 기사의 비중은 9.1%에 달하고 있다. 또 정부와 정책에 대한 폭넓은 책임을 제기하는 ‘구조적 문제’의 비중 역시 비교적 높은 23.6%였다. ‘문제당사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중도 두 신문 모두 20%를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언론사 간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광명일보>의 경우 ‘책임소재를 알 수 없다’는 비중이 다소 높았고, ‘정부책임’보다 ‘문제 당사자’에 더 주목한다는 차이는 발견된다.

‘용산참사’ 또는 ‘용산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언론의 정치적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 5>에 따르면 <한겨레>에서 주된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비중은 60%에 달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책임소재를 ‘문제당사자’에게서 찾았고, 이는 44%의 높은 비중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겨레>에서 당사자의 책임을 묻는 비중은 6%에 불과했다.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따라서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는 비중’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동북아시아 언론에서 국가발전, 인권 및 다양성 등과 같은 규범적 가치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언론모델은 언론을 단순한 중재자로 설정하는지 또는 적극적인 옹호자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언론을 국민을 계도하고 국가목표를 이끌어 가는 엘리트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파워엘리트를 감시하는 파수꾼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도 언론의 존재가치는 달라진다. 다음 <표 6>에 나오듯 다양성과 균형성이

라는 판단기준을 통해서 봤을 때 언론의 정체성은 쉽게 파악되지 않았다.

(표 6) 다양성 및 균형성 비중⁵⁾

신문		다양한 의견 있음	양비론 시각 있음	해당 사항 없음	소계
일본	아사히	13%	10%	77%	100(41)
	산케이	7%	3%	90%	100(61)
중국	인민일보			100%	100(55)
	광명일보	3%		97%	100(38)
한국	조선일보	30%	35%	35%	100(50)
	한겨레	18%	10%	72%	100(50)
소 계		11%(33)	9%(27)	80%(235)	100%(295)

먼저 일본 언론에서 의견 다양성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고, 양비론적 시각도 높지 않았다. 물론 중립을 표방하는 <아사히>에서 다양한 의견과 양비론 시각의 비중은 각각 13%와 10%로 <산케이>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가치는 전체 기사 중에서 10%에 불과한 기사에서만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한국 언론에서 이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략적 객관주의 관행’의 고착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중국 언론에서 다양한 의견과 양비론 시각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특정한 사회정책에 대한 지원 또는 병리현상의 해결에 대한 사회주의 언론의 전통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견의 다양성’과 ‘객관주의’ 전략은 상업적 언론의 대표적인

5) 특정 사안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복수’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 한해 ‘다양성 있음’으로 코딩했다. 이와 달리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이 기계적으로 포함된 경우에 한해 ‘양비론 있음’으로 코딩했다.

특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특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경우 또는 특정 이슈를 의제화하고자 할 경우 양비론이나 기계적 중립은 지켜지지 않는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잘 확인된다. 위의 <표 6>에 따르면 <조선일보>에서 ‘상반된 의견이 있다’와 ‘양비론적 시각이 있다’는 비중은 각각 30.4%와 34.8%에 달했다. ‘용산사고’라는 논란적 사안에 대한 상업주의적 언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결과다. 그러나 <한겨레>의 경우 그 비중은 18%와 10%에 불과함으로써 ‘다양성’ 보다는 특정한 가치 또는 정치적 주장을 더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한겨레>가 ‘균형성’이나 ‘다양성’을 <조선일보>에 비해 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령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의제화 하고자 하는 사안일 경우 그 결과는 <표 6>과 정반대로 나타날 개연성이 아주 높다.

〈표 7〉 규범적 가치의 지향성

신문		인권/자유	질서/안정/통합	애국심	계몽	여론수렴	해당없음	소계
일본	아사히		15%		8%		77%	100(41)
	산케이	3%	8%		10%	3%	76%	100(61)
중국	인민일보	6%			16%		78%	100(55)
	광명일보	5%			18%		77%	100(38)
한국	조선일보	4%	16%	8%	4%	4%	64%	100(50)
	한겨레	24%	8%		4%	8%	56%	100(50)
소계		7% (21)	8% (23)	1% (4)	10% (29)	3% (8)	71% (210)	100% (295)

‘무차별 살인’이라는 사회병리적 현상에 대해 일본 언론이 사회적 통합과 국민들의 의식 계몽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부분적으로만 밝혀졌다. 즉 위의 <표 7>에서 알 수 있듯, 두 신문 모두 ‘질서/안정/통합’ 및 ‘계몽’과 같은 가치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

질서와 안정을 주장하는 비중은 <아사히>에서 더 높았고, ‘인권/자유’ 또는 ‘정부가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가치는 <산케이>에서만 발견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두 신문이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는 ‘중립적인 관찰자’라는 언론의 규범적 가치와 일치한다.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인민일보>와 <광명일보>에서도 ‘인권/자유’와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는 옹호되고 있다. 그러나 ‘여론수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분석사례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계몽’과 관련된 기사의 비중은 두 신문 모두 비교적 높은 16.4%와 18.4%에 달했다. 그리고 <표 7>의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 언론이 ‘계도적’ 역할을 중시하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점진적으로 자율성을 확대해 가고 있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적 입장 또는 정부와의 유착관계를 떠나 다원주의 언론 모델에서 언론의 역할은 특정한 가치를 주장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치를 ‘중립’적으로 중재하는 것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이러한 국제적 관행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표 7>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일부 특정 가치를 지향하는 기사가 발견되지만 두 신문에서 가치 지향적 기사의 비중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관행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서도 두 신문은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의 경우 ‘인권/자유’의 비중은 24%로 <조선일보>의 2% 보다 훨씬 높다. 반면, ‘질서/안정/통합’의 가치는 <조선일보>가 <한겨레>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 <조선일보>에서는 ‘애국심과 국민적 공지’를 강조하는 기사도 일부 발견되었고, 두 신문 모두 ‘계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 언론이 여전히 ‘엘리트주의적’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V. 결론 및 함의

지난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동북아 3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집단적 금융안보의 필요성과 역내 통합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 이후 역내 협력 문제는 추진력을 상실했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그 필요성은 한 번 더 부각되었다. 물론 아시아 국가들 간의 반목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진 것으로, 중국과 일본이 주도권 다툼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또 유럽과 달리 정치체제는 물론 경제적 수준이 천차만별인 아시아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협력 모델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의 분열은 ‘자연적’인 것 이라기보다는 국제정치 질서의 부산물이었다. 역내 국가 간 반목과 경쟁의식 역시 ‘공통된 이해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고착화된 데서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동북아 협력과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비전은 아시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차이를 인정할 때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동북아 협력의 한 방편으로 한중일 3개국 언론에 대한 이해를 시도했다.

동북아 언론을 이해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전 세계 언론의 유형을 크게 영미식, 북유럽식 및 발전모델로 구분했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 한중일 언론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간략하게 각국 언론의 역사적 변화와 특성을 정리했다. 끝으로, 국가별로 유사한 갈등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기사유형, 기사작성자, 권위자 분포,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태도 및 규범적 가치’ 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 언론의 중재역할 및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했고, 이에 따라

‘묻지마 살인사건’(일본), ‘멜라민 분유파동’(중국) 및 ‘용산철거민 참사’(한국) 등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또 국가별로 정치적 입장과 핵심 독자층이 다른 언론사 2곳을 정해 샘플을 모았고, 여기에는 중국의 <인민일보>와 <광명일보>, 일본의 <아사히>와 <산케이> 그리고 한국의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포함되었다.

분석된 기사의 수가 많지 않았고(국가별로 평균 100개 정도) 분석사례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을 통해서 유추된 첫 번째 공통점은 스트레이트, 기획기사, 인터뷰기사, 칼럼 등 다양한 형태의 기사유형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통해 최소한 언론의 보도양식은 국제적인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스트레이트형과 단순 의견기사 중심이었던 중국에서도 심층, 탐방, 인터뷰 기사가 발견되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언론의 상대적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정부가 언론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자유다원주의 사회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는 흔하게 발견되었다. 언론은 또 정보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내용분석이라는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정부비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체제 위협적’인 사안이 아닐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은 어디서나 용인되고 있었다.

세 번째 공통점으로는 해당 매체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보도양상이 다르고, 이는 언론의 ‘정파성’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언론의 정파적 접근은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발견되었고, 언론은 이 과정에서 ‘담론을 통한 설득’ 작업을 담당했다.

넷째로 언론이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보편적 현상으로 발견되었다. 물론 분석사례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중국에서도 ‘정부관료’들

을 중심으로 한 독점적 목소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 일반 시민이나 사회단체 및 ‘기타’에 속하는 다양한 권위자들이 인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듯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은 언론의 자율성 확대와 매체의 증가에 따른 ‘담론경쟁’과 무관하지 않았다.

끝으로, 언론이 스스로를 ‘엘리트’로 규정하면서 국민을 계도하거나 공동의 이해를 위해 ‘질서와 안정’을 강조하는 모습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언론이 여전히 주목하는 권위자는 ‘정부와 정치인 또는 기업인’과 같은 엘리트 그룹이었다. 또 비록 그 빈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안정과 질서’, ‘애국심’과 같은 가치를 옹호하는 기사를 싣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별 차이도 존재했다. 그 첫 번째로, 일본 및 중국과 달리 한국 신문의 경우 상당히 규격화 된 ‘보도관행’을 공유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부분적으로 이는 동일한 광고시장을 상대로 언론사 간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두 번째로, 시장을 통한 경쟁체제에 있는 한국 및 일본과 달리 중국 언론의 경우 언론사 간 제휴관계가 잘 활성화 되어 있다는 차이점도 발견되었다. 즉 중국 언론에서 자국언론을 인용하는 비중은 한일 언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는 정부 주도로 언론사 간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있어서도 3국 언론은 일정한 차이를 드러냈다. 정부와 언론이 비교적 오랫동안 공생관계를 유지한 일본과 여전히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중국에서 정부/관료가 권위자로 인용되는 비중은 언론의 권력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및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에 있어서도 3국의 언론은 자국 정치시스템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끝으로, 발전모델에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 ‘객관주의’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반면, 한국에서는 이들 가치를 반영하는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동북아 언론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약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동일한 분석사례를 찾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가장 큰 단점이다. 둘째, 샘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신문들의 성격이 불분명했다는 점도 비판받을 수 있다. 즉 일본의 <아사히>와 <산케이>의 정치적 입장이나 독자층이 반드시 한국의 <조선일보>와 <한겨레>와 유사하지는 않다. 셋째, 분석된 기사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내용분석만으로 언론의 특성을 유추했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넷째, 한국에 온 유학생을 분석요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언어장벽에 따른 코더 간 신뢰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 받을 수 있다. 몇 차례의 교육을 실시하고 중복 코딩을 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자 했지만 허점이 없지 않았다. 다섯째, 한중일 언론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단위를 보다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보도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석단위를 보다 거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마지막으로, 실제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가 유추한 해석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못한 점도 이 연구의 약한 고리다. 그러나 이 연구는 동북아 언론을 이해하기 위해 언론모델을 적용하고, 현황을 분석한 다음, 실제 보도사례를 통해 각국 언론의 특성을 확인하는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투 고 일 : 2009년 12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1월 20일]

[계재확정일 : 2010년 01월 20일]

분석 신문

(분석기간: 2008년 3월-2009년 6월)

한국: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일본: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중국: 광명일보, 인민일보

참고문헌

- 김동률. 2009. “봉상스 없는 미움은 이제 그만.” 『서울신문』 (3월 31일).
- 김동환. 2009. “中, 멜라민 관련업자에 사형 선고(종합).” 『아시아경제』 (1월 23일).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12220303861569&nvr=y>(검색일: 2009.11.23).
- 김성해·안병익. 2007. 『글로벌 시대, 금융저널리즘의 이해』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성해·이동우. 2009. 『세계는 울퉁불퉁하다』. 서울: 민음사.
- 김영옥 외. 2009. 『한국 언론의 정파성』. 저널리즘 2020 실행위원회 보고서.
- 김영옥 외. 2007. 『미디어에 나타난 이웃: 한중일 언론의 상호보도 연구』.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태현. 2005. “동북아 평화균형자론과 21세기 한국책략.” 『정세와 정책』 5월호.
- 다니엘 헬린 · 파올로 만치니. 김수정 외 (옮김). 2009. 『미디어 시스템 형성과 진화』. 서울: 한국언론재단.
- 서라미·정재민. 2007. “한중일 3국 신문의 8·15 보도 비교분석.” 『한국 언론정보학보』 37.
- 윤영관. 2002. “테러 이후의 세계와 한반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국제정치와 한국.” 『창작과 비평』, 30(2).
- 윤영철. 2001.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서울: 유민문화재단.
- 윤영철·김성해. 2009. 『조문보도와 한국언론』. 한국언론재단 심층세미나. 6월.
- 오택섭, 권혁남, 김성태 외. 2006. 『현대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서울: 나남출판사.

- 이근. 2006. “꿈은 이루어진다: 한국 외교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비전.” 『미래전략연구원 보고서』. (3월 16일).
- 이찬근. 1998. 『투기자본과 미국의 패권』, 서울: 연구사.
- 이호영. 2008. 『일본의 미디어문화』, 서울: 시간의 물레.
- 이흥천. 2005. “일본 무료신문 2342만부 발행.”
http://www.koina.or.kr/technote/read.cgi?board=briefing&y_number=93&nnew=1(검색일: 2009.7.2).
- 장관순·강병한. 2008. “오만한 중화주의의… 나치 난동 연상.” 『경향신문』 (4월 29일).
- 제정임·이봉수. 2007. 『경제저널리즘의 종속성: 한국 신문의 재벌 보도와 광고의 관계』 서울: 한국언론재단.
- 조항제. 2003.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권력』. 서울: 한울출판사.
- 프리먼·로리 앤. 변정수 옮김. 2006. 『일본 미디어의 정보 카르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Freedom House. http://www.freedomhouse.org/uploads/fop08/FOTP2008_WorldRankings.pdf(검색일: 2009.07.07).
- Gamble, A., & Watanabe, T. 2004. *A Public Betrayed: An inside look at Japanese media atrocities and their warning to the West*, Washington: Regnery Pub.
- Gilpin, R. and J. M. Gilpin. 2001. *Global political economy: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ye, J., Philip D. and David, K. 1997.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Reporters without borders. 2009. <http://www.rsf.org/> (검색일: 2009.07.18).
- Saito, Shinichi. 2000. 'Japan', *Handbook of the media in Asia* (ed. Shelton Gunaratne). London: Sage.
- Sibert, F., Peterson, T. and Schramm, W. 1956. *Four theories of the press*.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tiglitz, J. 2002.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 London: Norton Pub.
- Wade, R. 2004.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illnat, L. & Weaver, D. 2003. "Through their eyes: The work of Foreign correspond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ism* 4(4).
- 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s. 2007. "World Press Trends: Global Newspaper Circulation, Advertising On the Upswing."
<http://www.wan-press.org/article14362.html>(검색일: 2009.07.20).
- Xing, Zhigang. 2004. "China." Werner vom Busch, eds. *The Asia Media directory*. Singapore: Konrad-Adenauer-Foundation Singapore.
- Yan, Liqun. 2000. "China." Shelton Gunaratne, eds. *Handbook of the media in Asia*. London: Sage.
- Zhao, Y. 1998. *Media, market, and democracy in China*.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The Development of East Asia Cooperation and the Media:
Case Study about Media Coverage over a
Social Conflict in East Asia Countries

KIM Sunghae

Visiting Fellow at Korea Press Foundation

SHIM Doobo

Associate Professor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fortunate era for the East Asian cooperation has opened. Not only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but also regime change in Japan and the U.S. has contributed to such an opening. Given that there are still many huddles for regional coordination, however, it is vital to secure continuous dialogue and mutual understanding. This paper thus aimed at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news media i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in way of improving better communication among East Asian countries. For this purpose, at first, various journalism model associated with East Asian situation has been explored. This study then examined the historical, managerial and socio-political aspect of the media in those three countries. By adopting three case studies including China's 'Melamine Infant Milk,' Japan's 'Indiscriminate Hate Killings' and Korea's 'Yongsan Tragedy,' in final, this paper has compared journalistic norms and values in those media. The results show, while the news media in three countries are attempting to maintain their own model indebted to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the Anglo-Saxon model of the U.S. has been gaining wider recognition in the field of journalism. The authors hope this study w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better grasp regional conditions of the media and contribute to the acceleration of East Asian cooperation.

Key Words : Asia community, media system, East Asia cooperation,
press and government, journalistic norms and values